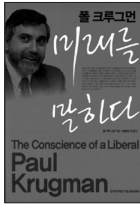


정치적 양극화, 불평등을 낳다

안현호 _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폴 크루그먼 지음

『미래를 말하다 The Conscience of a Liberal』

(현대경제연구원, 2008)

1. 진보주의자, 케인즈주의 경제학자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은 공화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자이며 공개적인 민주당 지지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에게 돌아갔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에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고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경제위기¹⁾의 상황, 이로 인해 1980년 이래 이어져온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종말을 고하려고 하는 상황,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어 미국의 정치적 지배권이 8년 만에 민주

1) 이제는 단순한 금융위기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물로까지 파급되는 총체적 경제위기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으로 이동한 것에 대한 크루그먼의 선명한 정치적 태도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는 않다.

크루그먼의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엿보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히 볼 수 있는 저서가 이 서평에서 다루는 『미래를 말하다』²⁾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크루그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시도한 뉴딜정책을 미국 경제가 취해야 할 전범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한다. 크루그먼은 18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미국 경제를 소득분배의 문제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아주 특별히 흥미로운 발상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름지기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라면 미국의 경쟁력, 미국 경제의 쇠퇴 등을 키워드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서, 그리하여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즉 크루그먼의 미국 경제 이해를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에 적용해 보고, 이후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결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주는 정치적 함의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이론적 논점: 쌍둥이 적자

우선 크루그먼이 묘사하는 미국 경제사를 보자. 크루그먼은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이전 이른바 도금시대(Gilded Age, 1870년대~1920년대), 뉴딜시대(New Deal, 1930년대~1970년대), 보수주의 운동 또는 새로운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Movement, 1980년대~현대)로 미국 경제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도금시대는 보수주의의 장기 지배 및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2) 원제는 한 자유주의자의 양심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자유주의의 미국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적절하게도 진보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야기한 경제위기로 종말을 고했는데 이는 진보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 비슷한 논리로 1980년대 집권한 새로운 보수주의 시대 역시 뉴딜체제의 붕괴로 인한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건전한 미국 경제가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점은 논증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전제로 간주한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소득분배를 경제학의 주제로 삼은 시기는 고전과 경제학의 시기였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학의 키워드는 소득분배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었다. 이 점에서 보아도 크루그먼은 보통 이상의 경제학자, 즉 정치경제학자라 할 만하다. 물론 크루그먼은 현대 경제학의 맥락에서 보면 케인즈 경제학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 책에서 크루그먼이 미국 경제가 따라야 할 전범으로 파악한 뉴딜정책이야말로 케인즈 이론의 정책 대안이었던 것이다. 뉴딜정책은 1) 시장경제의 규제, 개입, 간섭을 한 축으로 하여 2) 노동조합 등 진보적이고 대안적 제도 형태의 지지, 3) 증세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복지정책 추구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뉴딜정책은 보수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지만 사실상 케인즈적 개입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크루그먼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거치면서 이후에 꾸준히 발생한 불평등의 심화를 경제적 문제로 본다는 것은 한국에 사는 경제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논평자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그 자체로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여겨 크게 논의한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과연 소득분배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한국 경제의 큰 과제로 여기고 있는가? 단순히 미시적, 산업적 차원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는 거시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도 항상 국민경제의 안정성, 경쟁력 등을 이야기하지, 궁극적으로 한국 안에 사는 다수 대중의 경제적 안녕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

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경제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에서 뉴딜정책의 효력이 왜 소진되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정치적 과정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은 적절하고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반면, 뉴딜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결부되었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뉴딜정책 또는 뉴딜체제가 침식되는 과정을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 과정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1970년대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의의를 간과하는 것이다. 과연 1980년대의 보수주의의 집권이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기획의 결과로서만 나타난 것일까? 1945년 이후의 선진국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글린과 서트클리프(A. Glyn & Bob Sutcliffe)는 1970년대의 위기를 노동계급의 정치참여와 케인즈적 개입주의 정책의 결과로 인한 분배 위기로 본다. 또 프랑스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알랭 리피에즈는 1970년대의 세계 경제 위기는 자기파멸적인 경쟁에 기반한 자본축적 방식이 노동량에 대비한 기계 장비의 확대를 초래하여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주목할 때 우리는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도 주목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 때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했지만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의 곤란을 집약해주는 현상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무역적자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악화된 재정적자로 인해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질서, 즉 달러본위의 변동환율제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관된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제 규정자의 지위에서 단지 세계 경제의 큰 부분으로 위치하게 되어 다른 나라 경제와 같은 운명에 놓인 것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가장 큰 공신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와 뒤이은 금융위기, 실물경제의 침체는 한편으로는 보수주의 운동의 탈규제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스템 자체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재분배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경제 시스템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 개제되어 있다면, 재분배 정책과 개입정책으로 구성된 진보적 뉴딜정책이 실현된다 하더라도(그런데 이조차도 민주당의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부분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 성장률이 예측될 정도로 대규모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탈규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도입하여, 위기에 대비하기는커녕 위기를 증폭시킬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가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이 위기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 공황에 직면하여 건설 경기부양을 축으로 하는 선부른 경기부양 정책³⁾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부족을 보여줄 것이다. 오히려 공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과 개입과 정부지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것조차도 모순의 발발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3. 반면교사: 어떤 조건하에서 진보주의는 집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서평자의 비판적 검토는 이 책의 장점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 경제사 책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경제사 책으로

3) 이것도 개입주의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읽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이 분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진보주의 경제학자의 독단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 책이 많은 시간을 들여 논증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경청해야 할 주장은, 그러한 소득불평등이 세계화라는 경제구조나 기술혁신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 격차를 확대”했다는 가설이다.

또한 이 책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주장은 보수주의의 장기 집권이 미국민의 보수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 운동의 준비된 기획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보수화의 주요한 기제로써 미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보수적 속성인 인종문제를 거론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이조차도 보수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적절히 이용한 이슈로 파악한다(이 책의 8장과 9장을 보라). 반대로 진보주의의 집권은 보수주의 정치가 실패한 결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뉴딜이 가능해진 것도 도금시대의 부의 집중이 장기화된 결과 발생한 대공황으로 더 이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불가능해진 것에서, 그리고 2008년 민주당의 재집권 역시 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됨으로써 공화당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결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크루그먼은 뉴딜의 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수주의, 즉 보수주의 운동이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해가는가를 아주 정밀히 추적해 가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과정은 1960년대부터 치밀히 준비된 프로젝트였다.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편견에 착목하여 민주당에 붙어 있던 남부의 지지를 떼어내는 과정, 진보주의적 행태를 무질서의 원인으로 매도하는 과정을 통해 관용을 모든 악의 원인으로 집중시켰다(p.115). 그러나 그 실천 과정은 보수주의 언론, 보수주의 학자, 보수주의 연구소를 막대한 자금으로 통합시켜 공화당을 새로이 네트워킹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네트워킹을 통해 개혁적 공화당원이 연방의원이나 하원, 상원

의원이 되지 못하게 막았으며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세속적 잡담의 수준에서 학문적 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된 보수주의의 재구축이 실현되는 것은 1970년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였다. 크루그먼에 의하면 진보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본주의의 암울한 면을 모두 진보주의의 탓으로 돌리면서 반공주의와 결합한 보수주의가 성공적으로 집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p.158).

정치적 과정에 흐르는 경제적 문제의 이면을 무시한다면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신우파(뉴라이트) 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뉴라이트 운동 역시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탈근대주의적 비판을 등에 업고 식민지 시대, 해방 직후의 한국 사회,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대한 근대화론적 해석을 통해 상실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언론, 학계, 정계의 보수주의 세력이 통합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은 새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지만 이후 이어지는 교과서 논쟁, 정책 산출에서의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분열의 상황에 처해 있다.

1929년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진보주의 운동도 좋은 관찰의 대상이다. 크루그먼은 경제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도금시대의 기간을 1929년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1900년도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진보주의 정치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면서 사실상 도금시대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분쇄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896년에는 금권정치의 과두제에 도전하는 시도가 있었다. 제니스 브라이언은 민주당과 인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동시 임명되어 대통령에 도전했다. 하지만 농민에 기초한 인민당과 도시민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 이민자와 현지인의 차이, 백인 농부와 흑인 농부의 차이라는 인종주의의 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연합은 실패하게 된다(p.44). 이 과정은 1933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등장으로 비로소 해결된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민노당·진보신당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한다. 주지하듯이 민주당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주의의 수혜자였다. 지난 정부는 민주당 기반의 지역을 포함한 지방 세력을 연합시켜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혁신을 시도했지만 ‘혁신적 민주당’(열린우리당)은 결국 ‘도로 민주당’으로 귀결되었다.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 지지도나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의 예정된 정치 과정에서 민주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 정치에서 유일하게 진보세력의 연합이었던 1896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의 연합과 단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논평자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뉴딜시대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요 조직기반이었으며 돈줄이기도 했다. 뉴딜시대의 주요 정책은 노동운동의 합법화와 제도화였으며 이는 빈부격차를 경향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당에 큰 이득이 되었다(p.95). 1948년부터 1970년대까지 민주당 연합세력이 미국을 지배하는 동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혁신적 세금 정책,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노조의 제도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존재했다.

미국 민주당의 세력 기반으로서의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이 주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조직적 유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중산층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노총의 정체성 변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독재정부에 저항하던 초기 민주노동운동은 전투적이었고 혁명적이었지만 오늘날 대기업 조직 노동자에 기반한 민주노총은 산별화한다 하더라도 종래의 전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미 대기업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상 중간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중간 계층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중간 계급의 소득과 지위 향상의 성격이 농후한 운동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는 급진적이지 않은 민주적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같이 갈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인 것이다. 이는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비정규직 문제제기가 민주노총의 대중조직과 잘 결합하지 못하는 현상과도 연관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평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크루그먼에 의하면 이는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통해 법제도상으로, 즉 정당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정강정책을 가진 한국 민주당의 지지도 정체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하나의 추론으로 미국에는 혁신정당이 없어 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민주당 내에 포섭된 반면,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정당이 존재하므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지지도를 나눠가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법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험은 양당이 자신의 지지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및 최저임금제) 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접근법이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더 참신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크루그먼의 인식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미국 사회의 계급 관계와 지지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루그먼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소득불평등의 증가로부터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류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의식이 진보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기계적인 적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감세를 포함한 현 정부의 보수적 정책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수록 진보세력의 지지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점차 커진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주의가 분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창의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가 진보세력에게 주어진다.

4. 진보주의자의 양심: 왜 진보주의는 보수적이고, 보수주의자는 급진적인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결론부의 13장일 것이다. 이 장에서 크루그먼은 진보주의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역설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이것이 21세기 미국의 모순(p.333)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민생 경제, 즉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복지 정책에서 한국의 진보세력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 평균화 정책 유지, 복지강화 등 기존의 경향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사실상 민생경제에 대한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체된 현 상태에 불만이 많은 대중에게는 아무튼 변화를 요구하는 보수주의자의 견해가 먹히는 추세를 보여왔다. 크루그먼은 이에 대해 재미있는 인용을 제시한다.

기묘한 시간의 연금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의 민주당을 아주 보수적인 당으로 바꿔놓았다. 민주당은 가장 좋은 것을 보존하고 그 기반 위에 견고하고 안정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반대로 공화당은 급진적으로 행동한다. 무모하고 심술궂은 이들의 집합같은 공화당은 미국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제도들을 폐지하는데 열심이다.(p.334에서 재인용)

크루그먼에 의하면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 그래야 성공한다. 크루그먼은 클린턴의 실패는 진보주의의 힘과 진보주의 운동을 추동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오바마에 주는 교훈은 오바마 역시 지난 30년간 손상된 뉴딜적 개혁을 다시 복구하는 진보주의 운동에 힘을 싣고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큰 기로에 놓여 있다. 과거의 투쟁 경력은 민중으로부터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크루그먼의 이 책이 '왜 강남은 계급투표를 하고 있는데 강북은 계급투표를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의 고수는 보수주의적인 주장은 아닐까? 우리는 아마도 경쟁의 도입이라는 개혁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묻는 한국의 진보진영에 대해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미국과 한국의 사회 발전의 차이, 역사적 배경의 차이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가설적 대답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진보진영의 보수주의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이 도입하려는 체제가 반민중적이고 반중산층적이어서 더 열악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체제의 유지냐 현 체제의 변화냐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의 잣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변화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변화한 결과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 즉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밀착과 이해가 더 필요하다. 언론, 이론과 자금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탄하기 전에 진보주의적 신념이라는 철학으로 굳세게 밀고 나가면서 연합해야 진보세력이 원하는 진보주의적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크루그먼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p.338).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들이 크루그먼의 책을 직접 읽어 보기를 권한다. 필자의 이 논평에는 현재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보험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 세력이 어떤 정당정책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흥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안현호(Ahn, Hyeon-Ho) harryahn@daegu.ac.kr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